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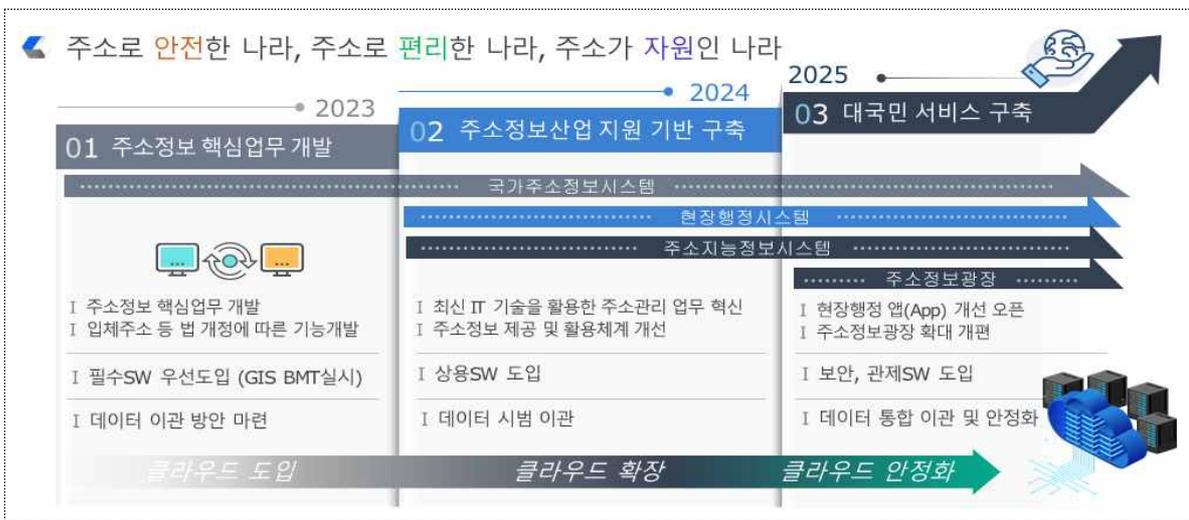
“도로에서 지하상가까지” 입체적 주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본격화

- 12년 만에 전면개편 되는 ‘주소정보관리시스템’ 1단계 사업 본격 추진, 2026년 개통 목표
- 4월 17일, 정부세종청사에서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」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
- 국민생활 편의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 제공

-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,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 주소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」이 구축된다.
- 행정안전부는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」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, 4월 17일(월)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」 사업은 전국 245개(행정시 포함) 자치단체, 1천여 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로명주소 부여·관리에 사용하는 ‘주소정보관리 시스템’을 개편하는 사업이다.
 - 2011년 구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, 2025년까지 3년간 3단계에 걸쳐 총 326억을 투입하여 2026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며, 1단계 사업은 올해 116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다.
-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수기로 처리해 왔던 주소업무를 전산화하여 지능형 업무환경을 구축한다.
 - 지난 2021년 6월 「도로명주소법」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입체 주소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하여 지금까지 지상도로와 건물에만 부여해 왔던 도로명주소를 입체도로(고가·지하 등)와 사물, 공간 등에 확대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발한다.
 - 예를 들어, 기존에 건물 출입구에만 부여했던 도로명주소를 건물 내부 동·층·호까지 부여할 수 있고, 지하상가에도 개별적으로 주소가 부여될 수 있다

- 아울러, 노후화되어 성능이 미흡하고,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주소 관련 자치단체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다양한 주소정보 관리·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고성능의 기반시설을 갖춘다.
- 향후, 2·3단계 사업에서는 ▲최신 정보기술(IT)을 활용한 주소관리 업무 혁신 ▲주소정보 제공 및 활용체계 개편 ▲현장행정시스템 개선 ▲자치단체 데이터 통합·이관 등 지난 2022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(ISP) 시, 확정된 연도별 목표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<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」 구축 로드맵 >



-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 및 민간 활용 분야가 폭넓은 주소정보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,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전담팀(TF)*」을 운영하여, 정책방향과 세부 구축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.

* (구성) 카카오, T맵, CJ대한통운 자치단체 등 / (운영) ~25.12.31일, 분기별 상시회의

-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“주소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 주소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,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”라며, “앞으로 주소정보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관련 산업 활성화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국정완 (044-205-3561)

참고1

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(1차) 구축 사업」 착수보고회 개최

□ 회의개요

- 일시/장소 : 4. 17(월), 14:00~15:00 / 정부세종청사 중앙동(중회의실)
- 참석 : 총 30여명
 - 행안부, 자치단체, 민간기업, 한국지역정보개발원, 사업수행사 등

< 사업 개요 >

- ▶ 기간/예산 : 계약일로부터 12. 31일까지 / **11,692백**(국비 5,906, 지방비 4,400)
- ▶ 수행업체 : (주)엘티메트릭 컨소시엄(엘티메트릭 40%, 올포랜드 35%, 포스웨이브 25%)
- ▶ 주요내용 : ①차세대 기능 개발, ②클라우드 인프라 도입, ③지자체 DB 통합

□ 주요내용

- 입체주소 등 차세대 주소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
 - 고가·내부도로 등 주소정보 업무처리 기능 및 지도 표출방안 제시
- 노후화된 주소정보관리시스템(KAIS)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 공유
 - 지역정보개발원 환경에 맞는 인프라(HW/SW) 설계·구축 결과 보고
- 시도·시군구에 분산된 주소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방안 발표
 - 지자체DB를 중앙DB로 이관·통합, 국제표준(ISO) 모델 적용 등

< 시간 계획 >

시간		내용	비고
14:00~14:05	5'	▶ 개회 및 참석자 소개	개발원
14:05~14:10	5'	▶ 인사말	지역기반정책관
14:10~14:35	25'	▶ 사업 착수보고	사업수행 PM
14:35~14:55	20'	▶ 토의 및 질의응답	참석자
14:55~15:00	5'	▶ 기념사진 촬영	참석자

□ 향후일정

- 주소정보 활용기업 업무 협의(~5월), TF 회의(수시), 완료보고(12월)

참고2

「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」 개념도

